

# 북러의 군사협력과 외교적 밀착의 전략적 함의

Online Series

2023. 10. 23. | CO 23-35

홍민(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난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김정은 당 총비서 접견 및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 소식을 전했다. 북한은 “미래지향적 백년대계 구축”, “공동의 행동 강화”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교류협력 계획을 확정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북러의 협력은 무기 및 군사기술 지원의 군사협력,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소위 ‘인민복리’로 포장된 경제협력, 외교에서의 상호 지지와 반미연합의 외교협력 등 세 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미 연합이라는 공통의 기치 아래 상호 실리의 핵심인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교환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러의 무기거래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무기거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사실 양측의 군사협력 가능성은 북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7.27) 열병식, 김정은 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9월 12~17일)을 통해 북러가 의도적으로 메시지화해 온 부분이다. 북러 정상회담 전부터 이미 무기거래를 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향후 북러의 군사협력 양상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물론 유럽 안보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속에 담긴 ‘전략적 의도’, 무기거래, 기술지원, 훈련 등 예상되는 군사협력 내용,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의미, 향후 예상 행보 등을 살펴본다.

## 북러 군사협력,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 연계하는 ‘대미 견제’ 카드

지난 9월 푸틴-김정은의 정상회담 관련 양측의 발언이나 보도에서 군사협력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정상회담 장소(우주기지), 주요 군사시설 방문을 대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군사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무기거래나 기술 지원은 비공개적으로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벤트’를 통해 군사협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것은 북러 모두 국제적 주목 효과, 대미 견제 메시지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 어떤 전략적·전술적 의도를 염두에 두었을까.

북러의 협력 의도는 단기적 이해 차원과 중장기 전략적 일치 차원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1년여의 정세 대응을 위해 북러가 서로 활용을 하는 단기적 이해 차원과 긴 호흡 아래 전략적 일치를 만드는 중장기적 차원이다. 북러의 군사협력은 러시아가 단기적 이해와 중장기적 전략 일치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협력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릴 만큼의 기대한 협력 효과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세 관리,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 양쪽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차원에서 ‘북러의 군사협력’을 활용하는 단기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이해 ①: 우크라이나 장기적 소모전 대응 대북한 군사협력 활용

우선 북러 군사협력의 단기적 이해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적 소모전’화에 대한 대응이다. 최근 미국 의회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3년 5월 이후 ‘장기적 소모전’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sup>1)</sup> 전투의 대부분이 포격전에 집중되면서 장기간의 사상자 발생, 장비 손실 및 탄약의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 수리 및 교체, 최전선 병력 순환, 포탄 및 탄약 조달 등에 급급한 국면에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5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러시아가 강제 동원을 시작하고 기존 공급을 넘어서는 양의 제3의 탄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소규모 공격 작전조차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2)</sup> 러시아에게 북한은 제재를 감수하면서 탄약과 포탄 등 소모전을 지원할 후방공급기지로서 최적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1) CRS,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September 14, 2023,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7068>> (검색일: 2023.10.23.).

2) Adam Taylor, “How Russia Learned From Mistakes to Slow Ukraine’s Counteroffensive,” *Washington Post*, September 8, 2023.

## 러시아의 이해 ②: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견제 및 미 대선 의식한 ‘심리전’ 차원

둘째,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하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전세의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은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리의 군사협력 메시지는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미국 내 전세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피로’를 자극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심리전’ 차원의 포석일 수 있는 것이다.

## 러시아의 이해 ③: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전선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차원

셋째, 동북아 및 한반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미 견제에 활용하는 차원이다. 북리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북아로도 연결된다. 강화된 한미일 안보협력, 미국의 서태평양 및 한반도 인근으로의 전력증강, 군사태세 강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캄차카반도 사이의 오희츠크해를 통한 서태평양 진출 통로의 안정적 관리, 베링해와 북극해 항로 관리, 한반도 동해에서의 미일 차단이 중요한 과제다. 사실상 동북아 및 서태평양에서의 미국 견제가 핵심이다. 최근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의 전력증강, 단독·양자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미국 견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리 간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해 “공동행동 강화”를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sup>3)</sup> 북리의 밀착 과시는 군사협력 및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전면부상시킴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한편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유럽 전선과 동북아 전선 양쪽을 연계하는 대미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는 북리의 군사협력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북한의 이해 ①: 대미 견제와 대중국 의존성 분산

북한에게도 군사협력은 단기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 우선 북리 공동전선은 한미일에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연방 외무상 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0.20.

고립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북한은 러시아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계속하고 북중러가 느슨하지만 외교적 연대를 유지해 나갈 경우 반미 코드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진영 내 승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을 부상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재래식 무기이든 핵무기이든 기술 지원을 통해 무기의 기술적 신뢰성과 억제력을 제고하고 핵무기 고도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와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통해 대중국 의존성을 분산하여 협력 창구를 넓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 북한의 이해 ②: 미국 대선 전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빼기박기’

북한 역시 미국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줄곧 ‘비핵화 불가론’과 함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완성을 주장해 왔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의 완성 시점이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시점과 맞물리는 점도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완성 선언’을 기반으로 대미 접근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실제 ‘핵·미사일 기술 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 대선 국면까지 핵·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빠르게 진전시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 그 기저에는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에 ‘빼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단기적으로 미국 및 한미일 대응용의 재래식 무기 협력 및 연합훈련 가능성

그렇다면 북러의 군사협력은 어떻게 전개될까. 미국 대선까지 향후 1년여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기여와 전세의 변화, 미국의 유럽(우크라이나)-중동(이스라엘)-동북아(중국·북한)에 대한 대응 양상, 미국의 국내 정치 변화 등에 따라 군사협력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북러 양측의 협력은 아직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가시적이고 직접적 위반의 모양새보다는 미국 및 한미일 대응 용도의 재래식 무기 협력 및 연합훈련 가능성이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0월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천 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9월 7~8일 나진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 같은 달 12일 러시아 선박 양가라호가 두나이항에



정박한 모습, 10월 1일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 티호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모습 등이 담겼다. 영국 국제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와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 14일 사이 최소 2척의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 나진항과 두나이하항 인근의 소규모 러시아 해군시설 사이를 적어도 다섯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 보고를 종합하면, 8월 말부터 북러 간 최소 6차례 해상 무기 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의 방러 기간(9.12.~17.) 이전부터 이미 무기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거래, 1년 전부터 대량생산체계 가동, 방러 전 지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은 1년 전부터 대량생산체계를 가동하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전쟁준비’를 명분으로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2022.6.8.~10.)에서 무기 생산공정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하고 2022년 11월 9일 방사포탄 생산공장에 대한 ‘비공개 현지지도’를 통해 “대구경방사포탄 계열생산을 위한 능력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 1년 이전부터 러시아 지원을 위한 대량생산에 박차를 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sup>4)</sup> 올해 7월 26~2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무장장비전시회 및 열병식 참석 직후, 북한은 김정은의 방러 한 달 전 두 차례 군수공장 현지지도(8월 5일, 13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때 미사일, 장갑차, 조정방사포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김정은의 지시를 전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포착한 8월 말 무기의 컨테이너 이동 정황은 김정은 방러 전 초도물량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년여 기간 북한은 한미일에 대응한 ‘전쟁준비’ 차원의 무기 생산 현대화를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는 대러시아 공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두 차례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언급한 무기 공장은 ‘대구경방사포탄’, 최신 소총과 저격무기, 포탄 및 폭약 제조 약전공장, 전술미사일 및 발사차량 생산공장, 유도기능을 가진 122mm, 240mm 방사포탄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등이었다. 대부분 현재 포격전 중심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서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무기들이다. 따라서 최근 드러난 무기 거래 정황은 최소 1년여 전부터 대량생

4)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월 16일 북한과 러시아 무기를 중재한 혐의로 러시아 소재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이 거래된 것으로 발표했다. “미, 북-러 무기거래 간련 3개 기관 제재…네트워크 발본색원,” 『연합뉴스』, 2023.8.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02400071?section=north-korea/all>> (검색일: 2023.10.23.).

산체계를 가동하여 생산한 무기체계를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제공하고 있는 동향으로 추정 가능해 보인다.

## 러시아의 대북한 무기 기술 지원 분야

북한의 무기 개발계획, 김정은 당 총비서의 방러 전 행보, 방러 당시의 방문 장소 등으로 봤을 때,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 분야는 크게 무기와 훈련분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무기분야에서는 ① 군사 정찰위성을 필두로 한 우주개발, ② 공군 현대화, ③ 방공망, ④ 잠수함 등 총 4개 분야의 가능성이 높다.

### ① 군사정찰위성 개발 지원

군사정찰위성은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과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최우선 국방력강화 정책”으로 강조한 바 있고 다종의 미사일 운용과 대미 견제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로 설정돼 있다.<sup>5)</sup> 특히 한국의 정찰위성 개발과의 경쟁 차원에서 2022년부터 가시적으로 주력해 온 핵심사업이다. 이번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장소로 우주기지를 선택한 점, 푸틴의 대북한 우주협력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을 볼 때 가능성이 높다.<sup>6)</sup> 러시아를 통해 발사체 및 위성체 성능 개선, 송수신체계, 광학카메라, 조종 및 운용기술, 위성 군집운용기술, 과학기술자 교류 등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 ② 공군 현대화 지원

북한은 한미에 비해 공군력의 절대적 열세에 있다. 열세 극복 방법으론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의 업그레이드와 대공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북한은 노후화된 4세대급 러시아제 Mig-29를 주력 전투기로 삼고 있으나 4.5 및 5세대급을 운용하고 있는 한미 공군력에는 열세다. 이번 방러 때 김정은은 전투기 생산기지를 방문, 직접 탑승해 보는 적극성을 보인 바 있는데,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 등 노후기종을 디스플레이 및 조종능력 측면에서 현대화 업그레이드를 기술적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북한이

5)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위력 강화 입장,” 『조선중앙통신』, 2023.5.30.

6) “4년 5개월만 재회...푸틴 ‘북 위성개발 도울 것’...김정은 ‘초대감사,’” 『연합뉴스』 2023.9.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103551096?section=search>> (검색일: 2023.10.23.).

지난 7월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셋별-4>형 고고도정찰기, <셋별-9>형 무인공격기 등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양산체계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방러 직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기존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개편한 부분이다. 이는 우주분야, 공군 현대화 지원을 위한 러시아 카운트파트너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대공미사일체계 지원

전투기를 비롯한 공군전력 증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을 고려, 한미 공군력 및 미사일에 대응해 방공망을 현대화하는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대공미사일로 <번개-5>호, <번개-6>호를 개발·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HQ-9과 유사하여 모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중국의 HQ-9은 러시아의 S-300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번개-6>호는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번개-5호>의 개량형으로 공개하였고 2021년 9월 30일에 실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sup>7)</sup> 북한의 번개 시리즈는 모두 원천 기술에 있어 러시아 S-300, S-400에 기반하고 있어, 레이더 및 요격체계를 현대화하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대공미사일체계는 동해상에서 한미일의 미사일과 공군전력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에게는 공동의 이해를 갖는 측면이 있다.

### ④ 수상함 개조 기술 지원

북한은 한미에 비해 해군력의 절대적 열세에 있다. 김정은은 방러 직전인 8월 28일 해군절 축하연설과 9월 7일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 연설을 통해 <해군무장장비 현대화 계획>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때 향후 ‘해군의 핵무장화’,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따라 해군이 국가핵억제력 구성부분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sup>8)</sup> 이어 방러 기간 태평양함대를 방문하여 대잠호의함을 시찰한 바 있다. 이런 행보로 볼 때, 수상함 개조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 관련해서는 개조에 따른 구조 불안정의 개선이나 잠수함 내 순항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가능해 보인다.

7)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노동신문』, 2021.9.30.

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에서 하신 축하연설,” 『조선중앙통신』, 2023.9.8.

## 북러 연합훈련, 한미일 차단 및 태평양 진출로 확보라는 전술적 목표

중국은 2012년 11월 첫 합동군사훈련 실시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최소 45회의 훈련을 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해군과 공군전력을 동원해 한반도 서해, 제주도 서남방, 독도 인근, 블라디보스토크, 오후츠크해 등에서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sup>9)</sup> 훈련 장소 및 동선으로 보면,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둘러싸고 남쪽으론 중국의 태평양 진출로 확보, 대한해협 및 동해상으로 한미일 견제, 북쪽으로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 확보 및 서태평양 진출로 확보 등이 목적이다. 선으로 연결하면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과 대부분 일치한다. 중국 모두 미국의 동북아 전력 투자를 억제하고 태평양으로의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서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러는 동해상의 한미일 전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통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북러 연합훈련은 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에 대응하는 시위적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다. 최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연합훈련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sup>10)</sup> 그러나 북중러 3자의 연합훈련 가능성은 당장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한 동기관 점에서 중국이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북러는 양자 연합훈련 또는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별도로 일정한 작전적 연계성을 갖는 훈련을 동시간대에 할 가능성이 있다.

## 러시아 외교장관 방북, 한반도 안보문제화와 협상 프로세스 속 담겨진 의도

이번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방북은 러시아와 북한 보도의 ‘차이’ 속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브로프 장관이 최설희 외무상과의 회담 직후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한미일 군사 활동 증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전제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 구축 지지, 북러의 지속적인 고위급 접촉 등이다. 반면 북한은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 증진”,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 속 호상지지와 연대”,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 고수”, “포괄적이고 전략적 관계 발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 공동행동 강화” 등을 밝혔다. 러시아는 주로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 평화 협상의 메시지에

9) 日本 防衛省, 中国情勢(東シナ海太平洋日本海), 2023.5.2., p. 1.

10) “러 국방 ‘북한과 연합훈련 개최 논의...이웃인데 왜 안되겠나,’” 『연합뉴스』, 2023.9.4.,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4162751080?input=1195m>> (검색일: 2023.10.23.).



방점을 찍었다면, 북한 보도는 주로 양자 관계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미묘한 차이는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와 관련이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프로세스를 언급한 것은 세 가지 메시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해결사적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메시지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호전적 러시아 이미지를 평화협상이나 중재자 이미지로 탈색시키는 차원이다. 10월 17~18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평화적 중재와 해결을 강조했던 맥락에서 러시아의 분쟁 해결사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두 개의 전장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안보’ 프레임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견제 메시지다. 라브로프는 한반도 긴장 증대의 원인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라고 지적했는데, 한반도 문제를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미일의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원인을 두는 ‘안보’ 프레임의 부각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설정은 ‘비핵화’가 아닌 ‘안전보장’ 문제로 초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기존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는 ‘안전보장’ 프레임의 연속선상에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정기적인 협상프로세스’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북한 대 한미일’ 구도에서 중러가 포함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안전보장’이란 포괄적 틀에서의 대화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2017년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해 왔는데, 양측의 적대적 행위 중단, 평화협정 체결 후 마지막으로 군비통제(군축)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라브로프의 발언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안전보장 차원에서 상호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가 될 수 있다.

향후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평화협상을 공세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보는 결국 미국 대선 전까지 북러 무기거래 부각을 희석하면서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문제를 안전보장과 핵군축 협상의 틀로 프레임화하려는 북러의 공조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